



[종합] 마힌드라 지배권 포기 쌍용자동차 '새 주인찾기' 가닥 04



Economy

코스피	2141.05 (+3.00)	코스닥	735.40 (+0.02)
금리 (2년)	0.874 (+0.014)	환율 (달러)	1213.90 (+6.70) (17일)

인천-대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文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비규제 지역 투기 풍선효과로 4개월 만에 규제지역 대폭 확대 고양·안성·안산·부천·평택 등 수도권 서부 대부분 조정대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정부가 반복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왔다. 현 정권 들어 21번째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내놓은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동안 실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 정권의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에 들어갔으며 그해 8월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수도권에 부활시키고 재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0월에는 신DTI 등을 도입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대책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은 대책 이후 안정화되다가도 다시 개발 이슈를 타고 오르길 반복했다.

거래 등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졌다. 급기야 정부는 기습적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LTV를 차등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었다.

규제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이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20일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으나 투기수요는 인천,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로 옮겨 붙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서는 아예 풍선효과가 발생할 장소를 없애버리는 6·17 대책으로 응수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한 것. 경기 김포와 파주, 인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 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특히 2018년 상반기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이 나오자 서울 집값이 요동쳤고, 이에 정부는 그해 9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역대급 9·13 대책을 내놨다. 전례 없이 강한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의 돈을 묶는 9·13 대책이 나오자 주택 시장은 빨리 안정을 찾아갔다.

정부가 규제에만 전념하고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잡힐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공급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겹투자자와 법인을 통한 편법 주택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입주기업 대표들이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연락소 폭파, 실망·낙담 “정부, 9·19선언 즉각 이행을”

개성공단 비대위 긴급기자회견 철수 때 놓고온 자산 1조원 달해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 이행 등 우리 정부에 과감한 실행 요청

미국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대화 협력 증중·지원” 촉구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 폐쇄하면서 공장, 기계 설비, 원부자재 등 1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자산을 북쪽에 고스란히 두고 온 개성공단 기업인이 그들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다시 빠르게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공장 재가동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북미 정상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은데다, 올해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이 와중에 다시 불거진 북측의 '도발'에 상당히 낙담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있는 비대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양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역장을 무너지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도 우리들의 염원처럼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말고 대승적으로 판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남북의 충돌을 막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남북 정상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과감하게 실행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빅4-중소법인간 회계생태계 구축, 상생”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김영식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

공인회계사(CPA) 2만2000여명을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새 수장으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64)가 선출됐다.

한공회는 17일 오후 2시 한공회 5층 대강당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45대 회장에 김 대표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득표율은 투표자의 40%였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첫 전자투표(온라인 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64.8%로 2016년 이뤄진 한공회장 선거 투표율(27%)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자투표 시행으로 젊은 회계사의 표심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번' 없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대표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40여년간 업계

이다"면서 "고객에게 회계사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빅4와 중견 회계법인의 양보를 받아내서 중소, 개인 회계법인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회원과의 상생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특히 빅4의 '양보'에 대해서 그는 "빅4와 중견 회계법인이 가진 감사에 필요한 산업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획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과의 상생을 이뤄내겠다. 협의를 통해 각 그룹의 규모에 맞는 감사 시스템을 제안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임 공인회계사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면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면에 계속>

/손범지 기자 sonumji301@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남북관계 악화 책임지고 사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8일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사임하기로 정한 시점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